



원앙들의 힘찬 비상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짜기 연못을 찾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들이 휴식을 취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듯 한꺼번에 날아 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험로’

도, 2026년까지 사유지 259만7732㎡ 매수 계획
지난 7년간 79만7766㎡ 매입… 목표 대비 30.7%
도의 거주·공동지분 등 소유 토지 추진 어려워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사업이 7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매수 실적은 목표 대비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 면적의 1.7%인 사유지 259만7732㎡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한라산국립공

원 보전·관리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자치도는 매해 사유지 매입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뒤 해당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경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 협의 매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년 간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수실적은 총 매수계획의 30.7%인 79만7766㎡

에 그치고 있다.

도는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인 약 53%가 도의 거주자이며,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인 토지 역시 55%가량을 차지해 소유자 간 의견 대립 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 별 매입 사유지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 (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 (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 (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 (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 (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 (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 (14억원) 등이다.

도는 향후 목표 연도인 2026년까지 179만9966㎡를 매수하겠다는 계

획이다.

올해는 25억원을 투입해 22만7000㎡를 매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4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토지 공유화 등 체계적 공원관리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지 소유자 행위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주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를 다각도로 전개해 소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4·3특별법 개정 공포안 의결

문 대통령, 4일 새해 첫 국무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제주4·3 희생자 보상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한국전

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국회 정개특위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 계속

어제 소위서 안건 상정됐지만 심사 진행 안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5일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 도지사후보자가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시장후보를 예고하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후순위로 오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설명만 이뤄지고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산회됐다. 정개특위는 5일 예정된 소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전문위원을 국회로 파견,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성수 식품

(육류 제수용·선물 세트) 제조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 축산물 취급 업소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기간 소비자들

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마트를 돌며 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하는지 여부, 포장육 선물 세

트 상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42
4일 <17시 기준> 누적 4768

